

우익 군국주의자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호우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13년 10월 7일

아베 수상은 9월 25일, 미국의 보수계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2013년 허먼칸상’ 수상 기념 연설(뉴욕)에서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부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가슴을 짝 펴고... 과거에 레이건, 체니, 키신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상하였고, 외국인으로서는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꽤 기쁘기도 했겠지만, 큰소리를 치는 것도 적당히 했으면 한다. ‘허먼칸상’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공헌한’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안전보장’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 이외의 국가의 ‘국가안전보장’에 공헌했다고 해서 수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국인 수상자가 없었던 것이며, 이번에 아베 수상이 수상했다는 것은 일본의 수상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것도 미국의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미국 ‘매파’의 군사적 요구에 전면적으로 복종하는 일본 수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해 아베 씨는 기뻐하며 우쭐거리면서 상을 받았다. 도대체 한 나라의 수상이 외국의 일개 민간 조직으로부터 그 나라의 안전보장에 크나큰 공헌을 했다 하여 표창을 받고 들떠 있다니 창피하지도 않단 말인가?

여하튼 거기서 그는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부르라며 뻔뻔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거리낌 없이 그렇게 부르기로 하겠다. 실제로 이 ‘우익 군국주의자’는 그 꼬리표에 부끄럼이 없게 행동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해금(解禁)’시켜 미군과 하나가 되어 지구상의 어디에나 자위대를 파견하여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무기금수원칙을 철폐하여 무기의 국제공동생산에 참여함과 동시에 무기를 어디에나 팔 수 있게 한다.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특정비밀보호법’을 통해 정보 은폐·정보 조작에 만전을 기하여 군사행동을 하기 쉽도록 한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 9 조의 속박을 제거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옷을 갈아 입혀 ‘보통의 군대’로 만든다. ‘우익 군국주의자’ 수상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다. 확실하게 군국주의로 돌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익 군국주의자’를 일본 국민의 60%정도가 지지하고 있다. 이는 그의 경제정책이 경기를 부양시켰다고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으로 극단적인 엔고가 바로 잡혀 수출기업의 실적이 회복되었고, 주가도 올랐으니 무언가 경기가 좋아진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생활이 나아진 것이 아닌데도 이런 분위기가 ‘우익 군국주의자’ 수상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일 게다. 많은 국민들은 그가 ‘우익 군국주의자’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자신들의 생활도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래된 이야기지만 600

만 명이나 되는 실업자를 안고 있던 1930년대 독일에서 1933년 1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뒤 겨우 3년 만에 완전고용상태로 개선이 되었고, 그런 경제정책상의 성과가 히틀러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지지를 낳은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그리고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국민이 그 뒤에 어떠한 운명을 겪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익 군국주의자'를 경제정책만으로 지지한다면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단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일이 10월 2일에 일어났다. 이 날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는 20년에 한 번 치르는 식년천궁(式年遷宮, 신사에서 일정한 해에 새 신전을 짓고 제신을 옮기는 일-역자 주)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내궁(內宮)의 '천어의식(遷御の儀)'이 열렸다. '천어의식'은 이세신궁의 '신체(ご神体, 신령이 머문다고 생각되는 제사의 대상물-역주)를 새로운 신전으로 옮기는 의식'으로 식년천궁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이다. 이 종교의식에 '우익 군국주의자' 수상이 참례하였다. 현직 수상의 참례는 1929년의 하마구치 오사치(浜口雄幸) 이래 84년만의 일이라 한다. 그 당시는 정교융합의 '국가신도(國家神道)'체제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 '국가신도'체제는 전쟁 이전 일본 군국주의자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하마구치 오사치 수상이 위에서 말한 의식에 참례한 2년 뒤인 1931년 9월에 이른바 '만주사변'이 시작되었고, 이후 일본은 곧장 파멸의 길로 나아갔다. 84년만의 참례를 통해 '우익 군국주의자' 수상은 일본을 그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2년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7년 뒤의 도쿄올림픽은 개최할 수 없게 될 텐데. 마치 1940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일본국 헌법은 그러한 전쟁 이전의 반성에 입각하여 엄격한 정교분리를 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 '천어의식'과 같은 종교의식에 참례하는 일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자격으로(사적으로) 참례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변명은 통용되지 않는다. '천어의식'에 일반 개인은 참례할 수 없다. '우익 군국주의자' 수상이 참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수상이기 때문이다. 이세신궁 측은 그가 수상이기 때문에 '수상으로서' 초대했을 것이다. 적어도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형식논리로서는 '수상이기 때문에' 참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곧 '수상으로서' 참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도 성립될 듯하다. 그렇지만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형식논리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종교 특히 신도와 정치가 분명하게 거리를 둘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요구하는 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상이 공공연하게 종교(특히 신도)의식에 참가하거나 종교행위(특히 신도의 그것)를 행하는 것은 수상과 그 종교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그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수상이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이상, '개인자격으로서'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자격으로' 종교행위를 하고 싶다면, 공개되지 않게 조용히 행하거나, 정식으로 휴가를 받아(그에 해당하는 급여도 물론 반납하고), 공용차도 사용하지 말고, 경호가 필요하다면 자비로 경호원을 고용하여, 담당 기자들의 수행 취재도 허락하지 않고, 그 밖의 '개인자격으로서'의 형식을 모

두 갓춘 뒤에 하면 될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듯 '우익 군국주의자'를 자인한 수상에 대하여 일본 매스컴의 반응은 무서울 정도로 둔감하다. 일본군 '위안부' 발언의 오사카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지율이 높은 정치가에게는 제대로 된 비판도 할 수 없는 게 일본 매스컴의 체질인 것인가. 이것도 두려운 이야기이다.